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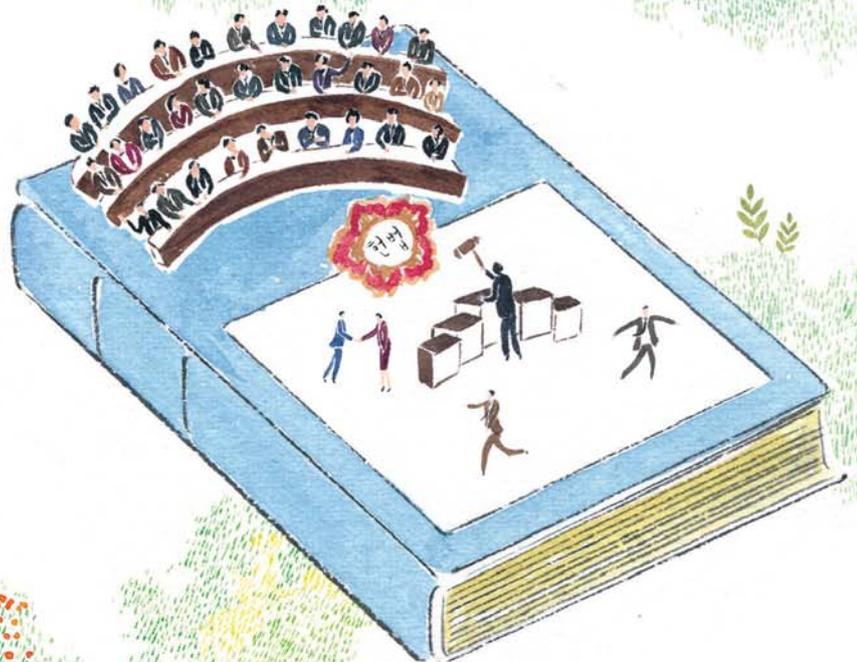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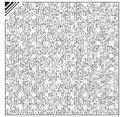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vol.644, July 2020

07



국회보

[표지이야기]

국가의 통치 이념이자 최상위 가치 체계인 헌법.
7월은 헌법의 가치를 돌아보는 달입니다.
초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운 애국심으로 탄생한
헌법의 가치를 기억하고, 수호하며
국민의 주권, 자유, 평등을 위해
국회는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44, July 202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발행인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문화소통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임익상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고상근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문화소통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서기정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박병석 국회의장은 누구인가

제21대국회 상임·특별위원장 선출

12 특별기고

72주년 맞이하는 제헌절의 재조명_ 심경수

대한민국헌법이 걸어온 길_ 음선필

16 길에서 길을 찾다_ 김선교 의원

천혜의 자연 갖춘 명품행복도시, 여주·양평

20 칭찬합시다_ 황희 의원

“대전환 시대에 국가성장과 평화 위해 힘쓸 것”

22 의원의 좌우명_ 박수영 의원

“인생의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가르침”

24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최혜영 의원

“장애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극복해야”

26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지역보건의 역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34 **법률 시대를 읽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의무 신설 및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_ 최시억

36 **법 시행 그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8 **기고**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_ 한공식

40 **주재관 리포트**

온라인상의 혐오 콘텐츠 규제법안 프랑스 의회 통과_ 김정연

42 **만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44 **위원회는 지금**

국회, 코로나19 사태 및 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논의

49 **국회스케치**

50 **국회 뉴스**

56 **국회 사람들**

국가재정사업은 무엇으로 선택받는가?_ 정환철

58 **경제이야기**

‘임대차 3법’의 나비효과_ 이진우

60 **청년에게 듣는다**

실패해도 괜찮은 작은 사회 ‘괜찮아마을’_ 박명호

62 **과학을 읽다**

뇌에 새겨지는 아동 학대_ 고희관

64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신라 과학의 아름다운 흔적, 경주 첨성대_ 이광표

68 **역사 속 길을 찾아**

승전고 울리던 그 바다에서 다시 푸르러지는 사람들_ 장태동

72 **생활 속 우리말글**

조사와 어미 바르게 쓰기_ 김형주

73 **정치 관련 주요 일지**

74 **편집 후기**

전방위 소통_ 이춘규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김상희 의원,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당선



6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6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제가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구가 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



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라는 뜻이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라며 "제21대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과 민생의 절박함 등으로 참으로 비상한 시기"라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공동 주체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국난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가자.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합의에 이르는 길이다. 통합도 소통에서 출발한다"며 "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 될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돼,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오늘은 73년 헌정사의 뜻깊은 이정표를 하나 세운 역사적 날이 됐다"며 "저에게 이러한 영광을 안겨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국회가 국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의 뜻을 받들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최초의 여성부의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당의 표결 불참으로 선출이 미뤄졌다. 🗳️

박병석 국회의장은 누구인가



족보 전문 출판사 '회상사'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대만 유학 당시 외국인 중국어응변대회에서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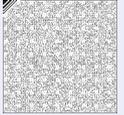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 의장에 선출됐다.

1952년 충남 대전(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난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중·고등학교와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 특파원, 정치부 차장, 산업부장, 경제2부장 및 부국장을 역임하며 23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

천년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내리 6선을 했다.

천안문 사태 현장을 끝까지 지킨 기자

성균관 부관장과 고령 박씨 총친회장을 지낸 박 의장의 부친(박홍구 웅)은 전국 족보의 80%를 만드는 출판업체 '회상사'를 운영하며 족보도서관을 설립한 인물이다. 1만여 권의 족보가 보관돼 있는



이 도서관은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독보적인 도서관이었다. 어려서부터 죽보를 접하며 자란 박 의장은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지리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부친의 가르침 덕분에 중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됐고 중국어를 한국어만큼 능숙하게 구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기자가 되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앙일보 면접 당시 '중국 전문기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혀 면접관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당시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적성국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다.

1985년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에 임명된 그는 중국 천안문 사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50여일간 베이징에 머물렀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됐고 외신기자들도 모두 베이징을 떠났다. 일본과 호주의 대사관 가족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마지막 전세비행기에 어렵게 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그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내쫓겠다"는 회사의 협박과 애원에도 박 의장은 "해고는 알아서 해라. 어쨌든 나는 결과를 지켜봐야겠다"며 끝까지 버텼고, 며칠 뒤 '조자양 총서기가 체포되었다'는 세계적 특종

을 따냈다. 이 기사로 그는 1989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이후 1996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시리즈로 두 번째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자민련 텃밭 대전에서 민주당으로 여의도 입성

박병석 국회의장은 1997년 대선 당시 대전 출신임에도 자민련 대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을 맡은 그는 IMF 외환위기 경제청문회 실무팀장, 김대중 총재 특보를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활동하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주변에서는 자민련 텃밭인 대전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를 극구 만류했다. 현직 서울 부시장인 만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라는 권고도 많았다. 그러나 박 의장은 지역 갈등을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과, 고향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결심을 굳혔고 결국 새바람을 일으키며 승리를 거두었다.

국회 입성 직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박



천안문 사태 특종 보도 등으로 '한국기자상' 두 번 수상



고건 시장 재임시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임

병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에 임명했다. 박 의장은 대변인으로 임명된 후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것이었고, 둘째 노코멘트를 할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대변인에서 물러났을 때 여러 언론은 '험한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인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제16대국회 시절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기 위해 기차를 700번 이상 타는 등

기자 시절처럼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민심에 귀를 기울였고, 지역민들은 그런 그의 부지런함과 꼼꼼함을 높이 평가했다.

제17대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기획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을 맡아 충청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행정수도 문제에 관여해 존재감을 높였다. 제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대전 지역에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고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한결같은 사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열린 합리적인 협상가라는 평을 듣는 박병석 의장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한결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평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직접 붓펜으로 자필편지를 써서 초선 국회의원의 자택으로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편지에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부터 보좌진 채용 시 참고사항, 의원연구단체 가입 시 주의점 등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당선 인사말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국난 극복을 위해 당론보다 국익을 생각해달라”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대전고 학생회장과 대전여고 학생으로 만나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부인 한명희 여사와 금슬이 좋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 의장은 고등학교



2007년 7월 국회보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 실린 박병석 국회의장과 부인 한명희 여사의 모습

교 때 처음 한명희 여사를 만난 후 100통의 연애편지를 쓰고 100편의 시를 외웠다고 한다. 그때 쌓은 내공 덕분인지 국어는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고, 지금도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마음에 와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

제21대국회 상임·특별위원장 선출



김태년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정무위원회



윤후덕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교육위원회



박광은 위원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민홍철 위원장
국방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한정애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투표 실시 후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6월 15일과 6월 29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제21대국회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선출된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국회운영위원장 김태년 의원 △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의원 △ 정부위원장 윤관석 의원 △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운 의원 △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중환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의원 △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 △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춘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제21대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정부비서관, 제16·17·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정부비서관, 제16·17·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

72주년 맞이하는 제헌절의 재조명



심경수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한국헌법학회장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 의원들은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어 나갈 삼천 만이 한결같이 지킬 언약”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대한민국 제헌헌법이다. 이들을 뽑는 선거가 1948년 5·10선거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이 이날 선출된 198명의 대표들에 의해 탄생했다. 제헌의원들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헌법제정과 초대 대통령 선출 등을 이뤄냈다.

5·10선거는 헌법의 제정과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의한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여기서 구성된 의회는 헌법제정회의를 의미했다. 다만 주권회복과 정부수립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1787년 미국 헌법제정 당시와는 달리 제헌의회가 일반의회를 겸하게 했다. 당연히 제헌의회의 최대 임무는 헌법제정이었다.

7월 17일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수립되고, 새로운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주권을 회복했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국민, 공화국, 민주주의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역사적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을 실체로 하고 또 주체로 하는 새로운 국가를 의미한다.

72년 지난 이 시점에도 잘 다듬어진 제헌헌법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은 전문(前文)·10장·103조로 구성됐다. 국가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영토,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했다. 평등권과 더불어 다양한 자유권을 규정했고, 노동3권,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



회는 단원제로 했고,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수호기관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뒀다. 경제질서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제헌헌법은 7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잘 다듬어진 대한민국의 그랜드 디자인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 후 아홉 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행 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현행 헌법 하에서 꽃피워

헌법규범을 포함한 모든 규범은 시공(時空)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헌헌법이 훌륭한 내용으로 규정됐다 해도, 먹는 문제, 즉 ‘보릿고개’가 해결되지 못했던 당시의 헌법현실은 헌법규범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빵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유의 문제가 거론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헌헌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명목적 헌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거쳐 제3공화국(제5차 개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빵의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엄격히 볼 때, 자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6·10 항쟁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헌법(제9차 개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것이기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은 현행 헌법 하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2020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 사회복

지 문제가 화두인데, 그것은 바로 ‘삶의 질’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주택자, 무직자에게 주거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18세기 구체제에 대한 시민계급의 정치적 선언을 의미했다면, 사회적 기본권은 20세기 시민사회 약자의 생존과 자유에 대한 역사적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의 보장이 권리의 본질인 반면,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한 국가적 급부의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인 오늘과 10달러 이하였던 72년 전 제헌 당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국가의 경제력은 다른 아닌 헌법의 규범력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헌법은 인권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빵의 문제도 인권이고, 자유권은 물론 사회적 기본권도 인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현대 헌법은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개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국가목표의 제시를 통해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이 걸어온 길



음선필 교수
홍익대 법학과

72년간 9차례 개정된 헌법

지난 72년 동안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됐다. 작은 규모의 개정은 네 차례(제1차·제2차·제4차·제6차 개헌), 큰 규모의 개정은 다섯 차례였다(제3차·제5차·제7차·제8차·제9차 개헌). 큰 규모의 개정은 4·19혁명, 5·16군사정변, 10월유신, 12·12사태, 6·10민주항쟁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격변의 산물이었다. 이 중 세 번은 정치군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세력에 의한 하향적 변화였으며, 나머지 두 번은 대다수 국민에 의한 상향적 변화(4·19혁명 및 6·10민주항쟁)였다. 정치권력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대한국민은 분명하게 저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헌법개정(제1차 및 제2차)은 주로 대통령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전쟁 중에 이뤄진 제1차 개헌(1952. 7. 4.)은 대통령을 국회 간선에서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했으며, 양원제 국회·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을 골자로 했다.

제1차 개헌은 ‘발췌개헌’의 형태로 이뤄졌기에 절차상 위헌이 문제가 됐다. 약 2년 후, 대통령의 3선제한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한 제2차 개헌(1954. 11. 27.)도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라는 명칭처럼 절차상의 위헌성을 지녔다.

제2차 개헌의 골자는 초대대통령에 한해 무제한 입후보를 허용하며,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며, 대통령 궐위 시에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헌으로 대통령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급기야 4·19혁명으로 연결됐고, 제3차 개헌으로 이어졌다.



제3차 개헌(1960. 6. 15.)은 기존 헌법체제에 대한 반발로서 기본권의 확대·강화, 의원내각제 채택, 복수정당제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경찰의 중립성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등을 내용으로 했다.

그런데 1960년 헌법은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정치세력의 퇴역적(退嬰的) 행태로 말미암아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1년여 지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이해됐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을 명분으로 내세운 군인세력의 등장을 초래했다. 그 결과 제5차 개헌(1962. 12. 26.)이 이뤄졌다.

제5차 개헌은 헌법상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 그 주요 골자는 철저한 정당제 국가를 추구하고, 국회를 단원제로 하며, 대통령제를 다시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며,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3선금지 규정의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1969. 10. 21.)과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1인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 개헌(1972. 12. 27.)이 이뤄졌다.

제7차 개헌은 이른바 ‘유신헌법’의 제정을 의미했다. 그 주요 골자는 기본권 보장의 전반적인 약화,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사전적·사후적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추천권 등 대통령의 절대권력 인정,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 인사권의 대통령 보유, 헌법위원회의 설치 등이었다.

제8차 개헌(1980. 10. 27.)으로 탄생한 1980년 헌법은 국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해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국회의 국정조사권 신설·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등을 근간으로 한 권력구조를 마련했다. 1980년 헌법은 유신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켰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었다.

평화적·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 제9차 개헌

1987년 제9차 개헌(1987. 10. 27.)은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적 열망을 최대한으로 수용한 합의개헌의 형태로 이뤄졌다. 제9차 개헌은 직선 대통령의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국회 권한의 회복 등을 핵심으로 했다.

1980년대 이래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민주, 복지, 통일 세 가지였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현행 헌법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은 민주체제의 기능부전(malfunction)을 야기하는 제도적 부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즉 민주체제를 구성하는 제도 및 국가기관 간의 관계가 정교하게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기능상 충돌 또는 부작용의 문제가 내재돼 있다. 불완전한 정당제도, 선거제도 및 국회제도와 맞물려서 ‘승자독식’ 또는 ‘분점정부’로 운용되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



양평 세미원에서



천혜의 자연 갖춘 명품행복도시,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
미래통합당,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바뀌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끝내 이뤄졌다. 여주·양평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소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제21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김선교 의원이 밝힌 소감이다.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민선 최연소 단체장, 최초의 3선 연임 군수를 거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많은 이들에게 누구든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김선교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시와 양평군을 찾아 그의 지역 사랑과 의정활동 포부를 들어봤다.

명품자연 속 문화 유적이 살아 숨 쉬는 여주

태백산맥, 차령산맥, 광주산맥 등 세 산맥으로 둘러싸인 여주시는 산세가 수려하고 ‘여강’이라 불리는 남한강이 흘러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남한강을 끼고 평야가 발달해 쌀과 고구마, 땅콩 등 농산물의 작황이 좋은 풍요로운 땅이다. 깨끗한 물, 질 좋은 고령토가 있어 예부터 도자기의 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주의 명소로 김선교 의원은 가장 먼저 천년고찰인 ‘신륵사’를 소개했다. 신륵사는 여강이 유유히 흐르는 봉미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사찰이다.

신륵사를 둘러본 김선교 의원은 “제가 양평군수만 세 번 해서 여주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4년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정활동의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에는 신륵사 외에 세종대왕릉(영릉)과 명성황후생가가 있다. 영릉은 조선 4대 임금 세종과 소헌왕후의 능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합장릉이다. 1446년(세종28년)에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당시 광주 헌릉의 서쪽에 쌍실의 능을 만들었다. 세조대에 영릉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능을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469년에 이곳 여주로 옮겨왔다. 또 명성황후 생가는 개화기에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다가 을미사변으로 일생을 마친 명성황후가 출생해 8세까지 살았던 집이다.

“여주에는 관광명소가 있긴 하지만 1차산업 외에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자랑스러운 세종대왕릉과 우리의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연계한 문화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캠핑 성지인 강천섬을 남이섬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지킬 것입

니다. 또 여주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대책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생태도시, 양평

양평군은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친환경 생태도시로,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남한강변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춰 펜션 및 전원주택 개발지로 각광받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 군수 시절 10년간(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77개 군단위 1위, 전국 최초 자전거레저특구, 헬스투어 힐링특구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양평군의 명소인 용문사로 취재진을 안내한 김선교 의원은 “용문사는 누구나 한번은 와봤을 정도로 유명해 제가 따로 설명 안해도 다 아실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수령은 약 1천200여 년이다. 천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높이 57m의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11:00



여주 신륵사

14:00



여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선교 의원



16:30



양평 용문사에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에 지팡이를 버리기 위해 꽂아놓은 것이 이 은행나무라고 하지요.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이 나무가 소리를 내어 알렸다고 하는데, 조선의 고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 가지 하나가 부러져 떨어졌다고 합니다.”

용문사에 이어 김선교 의원은 연꽃의 명소인 ‘세미원(洗美苑)’으로 발길을 돌렸다. 세미원에서는 해마다 7~8월이면 화려한 연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 한강의 수질정화를 위해 두물머리 근처에 연을 심기 시작한 것이 시초로, 세미원은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로 지정됐다.

김선교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문화, 환경을 두루 갖춘 명품 자원이 된다. 이를 통해 자급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양평을 위한 마스터플랜 실현할 것

김선교 의원은 “여주와 양평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제약이 많은 지역”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해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별도의 조직을 개편하고 개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선교 의원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여주·양평을 문화관광의 메카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살기 좋은 명품행복도시로 완성시킬 마스터플랜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3선의 노하우와 강한 추진력으로 당리당락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

경기 여주·양평 /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김성원 의원

“대전환 시대에 국가성장과 평화 위해 힘쓸 것”

지난달 국회보 ‘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다음 청찬 주자로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을 추천했다. 황희 의원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여당의원임에도 행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질문하는, 올곧고 소신 있는 의원”이라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현장경험, 열정적인 추진력까지 갖추셨다”고 소개했다. 이에 황희 의원은 “김성원 의원이야말로 성장가능성이 큰 의원”이라면서 “항상 열려 있고 포용성 있는 김 의원이 최근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칭찬과 응원으로 화답했다.

황희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시절 비서로 정치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제20대국회에 입성했다. 도시공학 박사로서 지난 4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한 황희 의원은, 최근 제21대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는 등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당과 청와대, 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회 경험을 두루 갖춘 황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이 걸어온 길이 곧 저의 정치철학”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사회 전체를 민주주의로 방향을 크게 틀고 기반을 다졌죠.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심화시켰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주의의 힘이 절정에 달하고 주권자가 국민임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 전체를 직접 경험한 것이 정치철학으로 체화됐습니다.”



“한반도 평화·4차산업혁명 위해 행정조직 개편은 필수”

황희 의원은 앞으로 4년을 위해 3가지 과제를 잡고 있다. 3가지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4차산업혁명’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잘 이끌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준비다. 그는 우선 한반도에 대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구도는 굉장한 모순”이라며 “한국의 수출의존도 1위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고, 한국 대기업의 생산기지 다수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모순은 극복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급물살을 탈 이유”라며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이기도 한 황희 의원은 “4차산업기술을 실현시키는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는 현재 한국이 세계 1등”이라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을 한국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성장을 행정이 발목 잡지 않도록 행정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행정조직 개편은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원회에서 하는데, 경험상 그 시기에는 행정조직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대선이 2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재선을 하고 많이 드는 생각은,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1대국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4차산업혁명 등 큰 변화가 몰아닥치는 대한민국 대전환기입니다. 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일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설렙니다.” 🍀



이헌승 의원을 추천합니다

황희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이헌승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을)을 추천했다. 황희 의원은 이헌승 의원에 대해 “국회 보좌관으로 출발한 3선 의원으로, 해외유학 경험도 있어 의회와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세계흐름에 대한 폭넓은 이해까지 모두 갖추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할 당시, 정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질의를 하는 모습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헌승 의원이 목소리를 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정쟁을 위한 시비나 이의제기를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당 의원에게는 뼈아픈 말을 하는 의원이지요. 반면,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후배들에게 아주 따뜻합니다. 종합해보면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의 장점을 합쳐놓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비의 유연함, 관우의 충직함, 장비의 돌파력을 모두 갖춘 이헌승 의원을 칭찬합니다.”

글. 서기정 사진. 임진완



박수영 의원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갑

국	궁	진	취
鞠	躬	盡	瘁

인생의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가르침

30여 년간 공직자의 길을 걷다 제21대국회에 입성한 박수영 의원의 좌우명은 ‘국궁진취(鞠躬盡瘁)’다.

“국궁진취는 온갖 정성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죽은 후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 출병하면서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바친 후출사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고등학교 때 박종화님의 삼국지를 처음 읽으면서 이 글귀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삼국지를 50~60번 정도 더 읽었다는 박 의원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천하의 제갈량도 국궁진취하며 살았는데 그보다 한참 모자란 나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5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에게도 고비는 있었다.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매일 300페이지 이상의 원서를 읽고 숙제를 하느라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영어 강의를 들으려 너무 애쓰다 보니 목이 통나무처럼 딱딱해지곤 했지요. 포기해버



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궁진척’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고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IMF 직후인 1998년에 찾아왔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등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진념 전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었고 제가 그 밑에서 행정개혁담당과장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 공기업 매각 등을 주도했습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며 일에 매달렸다는 박 의원은 퇴근도 못한 채 야전침대에서 눈을 붙여가며 6개월을 보냈다.

“실핏줄이 터져 ‘애꾸눈 잼’처럼 안대를 한 채 회의를 진행했고, 병에 걸려 입원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구조조정 대상자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고 같이 죽자며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업무량에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저의 좌우명을 생각하며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로 대한민국의 미래 바꿀 것”

박수영 의원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라는 이념은 자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매우 유연한 가치를 가진 이념입니다. 지금 보수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보수의 이념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이 사랑하는 보수 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저의 정치 모토입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를 첫 과제로 내세웠다.

“미국 대통령은 약 2천300개의 직위를 임명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1만630개 직위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직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국회의원 3선연임 제한, 특권 폐지 등을 통해 정치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최근 4·15 총선 패배 후 미래통합당이 지도체제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초선 당선인들이 당의 진로 설정과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두 번 발표했다. 그 중심에 박수영 의원이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야당 속 야당 역할을 하는 모임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고, 개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갑은 부산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다. 그는 이곳을 제대로 개발해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지역 현안으로 꼽았다.

“우암동 우암부두의 해양산업과 문현금융단지(BIFC)의 해양금융을 연결하고, 감만동 옛 부산외대 부지를 해양연구개발(R&D) 중심으로 개발해 ‘첨단해양 삼각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시절 박수영 의원은 허허벌판을 개발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주역이다. 덕분에 그에게는 ‘판교 신화’라는 이름표가 늘 따라다닌다.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보겠다는 게 박 의원의 각오다.

“30여 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치문화를 바꾸고, 부산경제와 국가경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국궁진척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장애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극복해야”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의원. 여성 척수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재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혜영 의원은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와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꿈 많은 무용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최혜영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거제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최혜영 의원은 집안에서 사랑받는 막내딸로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던 명랑한 소녀였다. 암 환자였던 이모님을 집안 식구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며 장래희망으로 간호사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중학교 수업시간에 무용을 처음 접하며 최 의원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무용이 재미있었고, 선생님도 소질이 있다며 추천을



해주셨어요. 계속 무용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께는 말할 엄두가 안 났어요. 직장에 다니던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자신이 벌어서 학원비를 지원할 테니 계속 무용을 하라고 선뜻 답하더라고요.”

최 의원은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원하던 대학에는 낙방했지만 다른 무용 전공자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살림 형편으로 대학 교수님께 ‘아르바이트 자리 구해주지 않으면 저는 공연 못합니다’라고 엄포를 놓기 일쑤였다. 교수님이 일자리를 알아봐주셔서 생활비를 벌며 무용을 계속했다”고 회상했다.

대학 4학년 때 최혜영 의원은 갑작스러운 빗길 교통사고로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고 친구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자신만 목뼈가 부러져 척수신경이 마비돼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됐다.

“교통사고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긍정적인 성격이라 그때는 치료만 하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물건을 던지며 부모님께 화도 냈지만 나중에는 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무용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최 의원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한 대기업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다 3개월 만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공부를 하고 국립재활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최 의원은 20대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해 장애가 있

어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 개선 확산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영입인재 1호에 걸맞게 일할 것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최 의원은 “‘정치를 하시겠느냐’가 아닌 ‘정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흥미로웠다. ‘제가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니 ‘잘하실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당내 유일한 장애인 의원인 최혜영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4년 뒤 임기를 마칠 즈음에 다양한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국회 내 불박이 의자, 좁은 통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여러 장벽을 없애고 싶다. 장애인들의 보좌관,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흔히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묻는데 장애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극복해야 할 일이지요. 앞으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시스템을 갖춰 세금 내는 장애인이 많은 사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은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란 용어가 사라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지역보건의 역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일자	주최자	토론회명
6. 3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6. 3	김상훈 의원,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6. 5	노웅래 의원, 디지털 뉴딜 라운드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
6. 8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 뉴딜 어디까지 왔나! : 그린 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
6. 16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 :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6. 17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보건복지부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
6. 19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임상 자원 마련과 의료 역량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선제적인 진단키트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당국의 3T(검사·Test, 추



적·Trace, 치료·Treat) 시스템을 통한 방역 노력으로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방역지침 이행과 개인 방역 실천 여부에 따라 확진자 수가 크게 변동했다”며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자제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진료 보조·행정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 치료 시설 관련 비용은 빠르게 지원되는 반면 지원 인력 관련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감염취약집단과 계층이 있다”면서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취약집단을 찾고, 어떻게 지원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가진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장기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非)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이라며 “응급, 수술, 분만, 소아 등 분야별로 치료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은 6월 3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전염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병

●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

원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통합적 지원서비스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돌봄 서비스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선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로당, 복지관 등 고령층을 위한 공공시설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학습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해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비대면서비스가 대면서비스를 완전히 또는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첨단 기술과 대면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이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때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디지털 뉴딜 라운드’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뉴딜 라운드는 지난 2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민관 협의체 ‘혁신성장협의회’의 주도로 국회, 정부, 지역 등이 참여하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노웅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뉴딜에서의 정부와 민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한국판 뉴딜 과제와 전략을 디지털 뉴딜 라운드를 통해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여야가 힘을 모아 관련 입법을



●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그린 뉴딜
 어디까지 왔나! :
 그린 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초발제를 맡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전략으로 △비대면 신산업 육성 △기업·산업 혁신 △생활밀착형 디지털 △디지털 인재 육성 △포용적 혁신 성장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 회장은 “K-방역 성공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 환경을 구축한 한국이 첨단기술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 전체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데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대표 우원식 의원)는 6월 8일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그린 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첫 세미나 주제는 ‘그린 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으로, 이후 매주 한 차례씩 네 차례 그린 뉴딜 관련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양의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속 세미나에 대해 “한국형 그린 뉴딜의 개념부터 산업계 동향, 재정 등 전반을 살피는 과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산업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표의원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이 제기됐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연구회를 시작으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은 미국 민주당과 유럽연합의 그린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세계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녹색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넷 제로)을 목표로 그린 뉴딜을 추진

●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 :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하고 있어 ‘탄소 국경세’ 등 무역장벽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사회 전환을 부를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제도개혁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위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대표 추경호 의원)은 6월 16일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출범한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경제전문가인 여야 의원 15명이 모여 만들었다. 추경호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대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협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은 이날 ‘기술 및 산업지형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바꾼 것은 세상이 바뀌는 속도”라며 “무형자산이 중요해지고 투자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제무역은 세계화·자유무역에서 블록화·보호무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8~2019년에 이어 미중 무역 경쟁은 하반기 화두가 될 것”이라며 “교역 성장 저하는 또 하나의 위협요인”이라고 부연했다.

김홍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이후 장기적 미중 대결 체제가 예상되지만, 양국이 모두 새로운 세계질서 비전이 부재한 혼돈의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중 양측의 압박이 예상보다 빨리 가중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계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할 ‘외교·안보·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갈등과 GVC(Global Value



●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도전과 대응**

Chain,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설명하며 2008년 금융위기·기술혁명·미중 무역 경쟁·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불확실성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 발제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살펴보고 “수요변화에 맞는 인재양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 의원·강창일 전 의원)는 6월 17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아동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미국, 영국 등 해외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국내에도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사와 사회복지사, 의사 등 외부인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발견되는 게 더 어려워졌다”면서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24시간 아동 학대 신고전화만 가능하고 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고 서비스는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한 공간에 있을 경우 전화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속가능한 아동 돌봄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감염병이 확산되면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은 물론 아동 돌봄·아동안전 등 여러 영역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적절한 추가소득 지원을 주장하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경제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 중심의 보편적 수당 확대가 중산층을 포괄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강화를 주장했다.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범죄화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잠입수사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대상을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관계·행위 등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며 잠입수사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잠입수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 근거 필요성으로 △위장수사에 대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가능요건 및 허용범위 명시 △수사관의 개인 신변상 안전 및 위장수사를 위한 위법행위 활동에 대한 보호 △법제화 효과에 따른 범죄 심리 억제 등을 꼽았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성착취를 당하기 이전에 성적 목적의 유인 과정·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불법성 높은 행위를 그루밍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온라인 그루밍의 법제화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법적 요소를 설명하며 “잠입수사 과정상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의적 제도 운영이 우려돼 내부통제가 아닌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정리. 서기정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의무 신설 및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신기술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했고, 이후 5G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그 이용이 편리해지는 만큼, 이용자가 기술을 악용해 범죄의 수단으로 삼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국민적 공분을 크게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온라인 통신수단은 정보의 전파가능성이 크므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그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에 의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2020년 5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부가통신서비스(인터넷 포털 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담았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및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신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조문으로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신체 도촬물 등), 불법편집물(합성물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앞서 언급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 등에서 성범죄에 의한 불법촬영물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페이스북(Facebook)’이 국내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망으로 우회하도록 접속 방식을 변경해 국내 이용자에게 접속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이후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서비스 품질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대두됐다. 이에 제20대국회에서는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됐고, 이를 통합·조정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및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제도 유효기간 연장

2015년 5월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하며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를 정책 방향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2015. 10.)했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제20대국회 개원 후인 2016년 6월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제20대국회에서는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에 관한 총 6건의 개정안이 발의 또는 제출됐다.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찬반의견이 대립했으나, 정부안과 같이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더라도 신고된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란 통신망이나 할당된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속칭 ‘알뜰폰’ 서비스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망의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위 제도는 2010년 도입 이후 그 유효기간이 2019년 9월까지 두 차례 연장된 바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도 2022년 9월까지 연장됐다. 앞으로도 ‘알뜰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제공됨으로써, 이용자들의 통신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재난에 따른 정신적 외상 국가가 돌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7호

지진, 화재, 감염병 유행 등 대형 재난은 피해자들에게 큰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남긴다. 재난 당시의 상황이 눈앞에 재연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때로는 몸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8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위치한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재난현장 다니며 심리 치료하는 안심버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을 모태로 지난 2018년 문을 열었다. 그 전에는 심리위기지원단이 재난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형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을 담당해왔지만 비상설 조직이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을 거치면서 국내에서는 피해자와 국민의 심리지원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등 센터의 업무를 명시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설립 이후 각종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심리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직접 재난현장을 찾아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이동버스(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움직이는 상담공간이다. 안심버스는 스트레스 측정기 등 각종 장비로 채워져 있다. 버스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호흡이나 큰



육이완같이 몸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여러 치료를 통해 환자의 안정을 돕는다. 지난 2018년 12월 개조를 완료한 안심버스는 2019년 강원 산불 현장과 진주 방화사건 등 다양한 국가 재난 사건에 투입됐다. 그 밖에도 센터는 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맡고 있다.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방역' 펼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더욱 바빠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불면증, 지나친 의심에 따른 주변인 경계, 외부활동 감소와 무기력 등 감염병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이에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공포를 극복해나가는 '심리 방역'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에 따른 대국민 심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 구성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총괄, 운영하며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보건소 및 전국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고 있다. 6월 23일 오전 9시 현재 확진자 및 가족 상담이 1만 8천740건, 격리자 및 일반인 상담이 27만 1천 795건으로 집계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일반 국민 등 대상별로 감염병 스트레스 돌봄을 위해 제작한 마음건강지침 및 마음건강안내서도 보급하고 있다. 불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는 마사지봉이나 컬러링북 등 '심리안정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응하느라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맞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소진관리 프로그램'도 실시 중이다. 의료기관이 센터로 신청하면, 교육, 그룹상담, 신체기반 활동, 명상, 예술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사업부 부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외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만 개소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지역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권역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글. 박민선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핫라인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3개 국립정신의료기관(나주, 춘천, 공주)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질병관리본부
02-2204-0001~2	055-520-2777	061-330-7724	033-260-3205	041-850-5883	1339

(격리자 및 일반인)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Tel: 1577-0199)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어느덧 31년째인 국회생활의 마감과 함께 국회홍보출판위원회(이하 ‘홍출위’)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서 5년 반가량의 활동을 접으려고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절반을 활동했으니 국회보는 물론 내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출근해 배달된 국회보 6월호를 훑어보면서 지난 홍출위에서 지적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본다.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의미 있었는지 모른다.

먼저 그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회보의 초안 작성에서 발행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신 국회보 편집 실무진을 비롯해 함께해온 홍출위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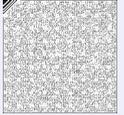
국회보는 국회개원 직후인 1949년 1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6·25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7월 현재 제644호가 발행됐다.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와 함께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월간지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다.

국회보는 국회를 보는 창이며 국회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창간호에서는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주로 실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보가 다루는 소재는 거의 유사하나 조금 더 다양해졌다.

홍출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연초에 한 번 결정하고 매달 게재하는 특집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홍출위가 열리기 2~3일 전에 배부된 국회보 시안을 검토해서 홍출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내용과 체계·자구는 물론 국회보 표지까지 꼼꼼



한공식 입법차장
국회사무처



히 챙겨보기도 한다. 특히 법제실장은 용어, 조사 등 자구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고쳐주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위원들의 노력으로 국회보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위원회 중 홍출위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

국회 내에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홍출위에서 활동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됐던 것 같다. 국회보를 직접 만든다는 주인의식으로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안목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홍출위 위원장으로서 2년간 활동은 위원일 때보다 시간적 여유는 없었으나 책임감은 배 이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마음만 있었지 제대로 일했는지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기도 하다.

홍출위에서 활동하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회보를 볼까라는 것보다 누가 읽더라도 좋은 국회 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또한 읽을거리가 홍수처럼 넘치는 현대에 국회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의장에서 일어나는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 다소 딱딱할 수 있기에 부드럽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코너를 두려고 했다.

그동안 홍출위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과 앞으로의 바람을 얘기하고자 한다. 창간호부터 있었던 편집후기가 어느 순간 없어졌으나 위원장이 되

면서 다시 신도록 했다. 후기란 국회보를 만들면서 있었던 후일담과 그달의 사건 사고들을 녹여서 신게 되는 화룡점정의 코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집후기를 쓰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의미를 담은 멋진 편집후기를 기대해본다.

홍출위에서 국회보 시안의 내용을 고칠 때는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정치편향이 심한 것을 주로 보았다. 특히 의원들이 쓴 글에 대해서는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았다. 그러나 ‘애송시’를 게재하는 코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원들이 애송시를 통해 왜 정치를 하는지 등 정치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코너인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해당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다음 호에 게재했고, 한번은 내용 변경 없이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해 해당 의원에게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이를 거부해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신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결국 위원장으로서 고민 끝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해 게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후 ‘애송시’ 코너는 시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의원의 좌우명’으로 대체했다.

앞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한 국회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국회의 상황을 넘어 시대적 정신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국회보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국회보를 만드는 사람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

온라인상의 혐오 콘텐츠 규제법안 프랑스 의회 통과

지난 5월 13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혐오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동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보면, 2018년 3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레티시아 아비아 하원의원, 카림 아멜랄 작가 및 질 타옌 프랑스유대기관 대표위원회(CRIF) 부위원장은 온라인상에서 혐오발언,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임무를 수행해 2018년 9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 2월 마크롱 대통령은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혐오발언 규제를 위한 법이 마련될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0일 여당(전진하는 공화국당, LREM) 소속 레티시아 아비아 하원의원은 동 보고서의 주요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의 혐오 콘텐츠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기존에도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 지침’과 프랑스 국내법인 ‘디지털 경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호스트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는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은 1년의 징역형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 법인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5배까지 부과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 도구 및 콘텐츠 삭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인터넷 호스트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 벌금의 5배인 37만 5천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의 재정 능력(2018년 페이스북 글로벌 매출 558억 달러 / 트위터 24억 달러)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김정연 프랑스주재관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와 같은 기존 법규정의 한계를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반종교적, 인종 차별적, 성적체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 등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24시간 이내에,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25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불법 콘텐츠 신고 양식을 마련해야 하고, 합법적 콘텐츠에 대한 신고 남용은 최고 1년의 금고형 및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콘텐츠 작성자에게 신고 일시 및 신고에 따른 운영자 측의 결정 사항을 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속·검색을 차단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알려야 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 게재 시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넷째, 최고시청각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급할 수 있고,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반복성을 고려해 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혐오 콘텐츠 전담 검사국의 신설 및 최고시청각위원회 산하에 혐오 콘텐츠 모니터링·분석을 위한 온라인 혐오 관측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동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

립디지털위원회, 인권자문위원회, 이민노동자의 유대인 저항자들에 대한 기억(MRJ-MOI) 등 시민단체들은 24시간이라는 짧은 기한 및 강력한 처벌 때문에 합법적 콘텐츠까지 대대적인 삭제 위험에 놓일 수 있어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로지 사법판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인터넷 플랫폼에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동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화당(우파)과 좌파, 극좌파의 의원들은 반대 입장으로, 60명 이상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6월 18일 헌법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24시간 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의 경우 1시간 이내 삭제 의무 포함)은 단순히 사용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판사와 같은 외부 기관의 개입도 없이 소셜미디어들이 자체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법률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표현 및 소통의 자유 행사를 불필요하고, 부적합하고, 과대하게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동 법안의 핵심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최종 공포될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상당히 약해지게 됐다고 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동 법의 시행이 기존법과 큰 차별성을 갖거나, 혐오 콘텐츠로 인한 희생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

나라에서 일자리 찾기 도와드립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노동위원회 2020-05-11 의결
본회의 2020-05-20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코로나19 사태 및 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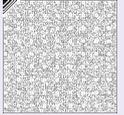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책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의원)가 6월 1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전체 회의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발생한 사태를 산업정책 전환의 계기로 보려 한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컴백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도 ‘유턴’할 때 수요자 맞춤형 전략 정책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강훈식, 이장섭, 이용선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위원들이 산업부의 리쇼어링 지원책에 대해 질의했다. 성 장관은 “그간 리쇼어링 지원정책 실적이 미비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메뉴판’을 잘 만들어놓고 기업들에게 ‘이걸 보고 돌아오라’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 있고 필요한 게 있어서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듀폰이 우리나라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계획을 확정지은 건 국내에 수요기업,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등이 있어서다”라며 “이런 생태계에 함께 참여하려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그저 임금 때문에 생산기



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기업 지원책도 기업별 타게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대학등록금 환불 및 부동산 대책 등 논의

기획재정부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6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대학등록금 환불, 6·17 부동산 대책, 기본소득 도입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전격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관련, 여당과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들어준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해줘야 한다”는 김경협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재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은 “기재부가 대단히 보수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 홍 부총리가 “본격적인 검토는 없었다”고 하자, 양향자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 속에 논의 중인 상황에서 논의 자체를 틀어막을 수 있다. 발언에 신중하라”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추경예산에 대해 “기존에 있던 사업이 그린 뉴딜 옷만 입고 다시 태어났다.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당과 제대로 협의가 없었다는 정일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비공식적으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우리 시장과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월가 등과도 접촉해 본 결과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만약 시장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 준비한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코로나19 감염 사태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6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종식 시기에 대해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먼저 백신이 개발된다면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검역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체계강화, 선별진료체계와 검사역량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상, 인력, 자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착시키고 고위험시설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오래된 숙제다. 10년 이상 의대 정원이 고정돼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와 상의해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만성병에 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중 어디로 이관할 것인가가 이슈인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이나”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청은 집행에 초점을 두는 조직이고 부는 정책에 역점을 두는 부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지면 방역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역이나 질병관리에 관한 큰 틀이나 정책은 부가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승격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묻는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내부적인 잡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 논란

6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의원)가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대검 검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행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한 점을 명문으로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일단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검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검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감찰이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검찰부의 존재의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한 수사검사들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논의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의원)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 통치 권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박성준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용어처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사행동은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했으니 군사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역할)보다는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동생인 김 부부장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실질적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추정했다.

정경두 장관은 또 “연락사무소 폭파가 군사합의를 파기한 건 아니라고 보느냐”는 김민기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다. 파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묻는 김병기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염두에)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움직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건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개발 완료됐다,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에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군대 철수 당시) 빠져나간 부대 중에는 전차 부대, 포부대 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의 주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국회의사당에 새겨진 제헌헌법

올해 7월 17일은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3층의 중앙홀 벽면에는 제헌의 의미를 기리는 뜻에서 198인의 제헌의원과 제헌헌법 전문(前文)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헌법 전문 동판 앞에는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개원한 지 48일 만에 제헌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당시 국회의사당이었던 구(舊) 중앙청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하는 전문(前文)과 10장·103조로 구성된 제헌헌법에 서명하고 공포했습니다.

국회에 새겨진 제헌헌법을 보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 우리 헌법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NEWS

6/15 박병석 국회의장, “남·북 모두 6·15 정신으로 돌아가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에서 “6·15 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 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 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 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 다. 또한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 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 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

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 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6/17 박병석 국회의장 “확실한 준비로 코로나19 위기 돌파해야 새로운 기회 만들 수 있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17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지금 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 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확



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위기를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내외포럼은 보건위기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뉴 노멀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

6/24 박병석 국회의장, 여성정치인 어울모임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24일 “신일곱 분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과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위원장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이번 제21대국회에서 실력과 헌신, 열정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일보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에 참석해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열렸다면 더 뜻깊은 모임이 되

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헌국회 때 여성 의원이 한 분도 안계셨고 두 자리 수가 넘었던 첫 기록이 제12대국회였다”면서 “이번 제21대국회에서 신일곱 분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 어찌 보면 장족의 발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적 발전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된다”며 “앞으로 여성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다.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실력으로 유권자들의 인식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외정(국회 산하 사단법인)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과 최초의 여성 국회부위원장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 열렸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희 국회부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심상정·남인순·이미경·이혜훈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유경현 헌정회장, 여성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의원회관 보안시스템 강화

국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 내 의원실과 사무실 등이 있는 3층 이상의 층마다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해 보안시

NEWS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의원회관 1·2층의 세미나실·식당 등 공용공간과, 3층 이상의 의원실·사무실 등 사무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방문 목적과 다르게 회관 내 모든 공간을 다닐 수 있어 의원실 무단방문·무단취재, 소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의원실 무단방문 신고 건수는 2018년 6건(47명), 지난해 23건(74명)으로 나타났다.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공용공간인 1·2층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3층 이상 사무공간에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직원, 국회출입기자 및 행정부 공무원은 의원증, 공무원증, 출입기자증 등으로 3층 이상 공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방문인은 방문 목적지가 있는 층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보안시스템 설치에 지난해 9월 ‘의원회관 보안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의원 및 보좌진 74%가 보안 강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 2020’ 발간

국회사무처는 제21대국회 개원에 맞춰 대한민국 법률의 연혁과 주요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법



률 2020’을 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 대한민국 법률 현황’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입법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통계를 중심으로 70여 년

간의 법률을 정리해 국회 입법활동의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부 상임위법률 체계 및 내용’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률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소관 법률의 연혁을 도식화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주요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제3부 제20대국회 입법동향’에서는 제20대국회에서 새로 제정된 법률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최근의 입법 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70여 년에 걸친 대한민국 법률의 변천과 입법활동의 추이에 대한 정리를 처음 시도했으며, 향후 제·개정된 법률 현황을 반영해 법률 연혁과 주요내용을 주기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국회 인사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차관급)



-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민선 5·6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1급)



- 충남대 한문학과
-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1급)



- 연세대 행정학 석사
-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국민의 나라위원회 선임팀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1급)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 국민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국회대변인

국회도서관, 서울대·전자신문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도서관은 6월 2일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서울대, 전자신문과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지능정보기술의 연구 및 개발, 빅데이터·AI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도서관, 디지털을 넘어 시로 : 시가 가져올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한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의 강연이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연은 국회도서관 최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돼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NEWS

국회예산정책처, 'NABO 정책자료집 II'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국회 개원을 기념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NABO 정책자료집 II'를 발간한다. 해당 정책자료집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

전략' 시리즈로 총 6권으로 구성된다.

각 권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총론)'은 산업구조, 인구구조, 기후 및 재정여건 등 주요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제2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 성장 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요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제3권부터 제5권까지는 각각 산업·인구·기후 부문별로 최근 우리나라 대내외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대응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4차산업기술의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3권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무역구조변화 대응전략'에서 제시한다. 또한, 제4권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제5권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신기후체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로드맵 이행 전략과 기후변화 관련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6권 '한국경제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전략'은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경제의 성장여건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적·미시적 재정전략을 모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국회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법안 및 예결산 심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NABO 정책자료집 II'를 발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현안을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21대 국회개원 기념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을 맞아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이용 매뉴얼' 등 8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1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은 제21대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0대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입법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국회입법조사처



12개팀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요약·정리했다.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는 제 21대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해외사례 연구 등을 소개해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한 국회 내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발간했다.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는 침체된 경제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조세·에너지·건설 분야 주요 이슈를 점검해 선도적으로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발간된 기획보고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용 매뉴얼’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 소개 및 이용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로,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입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국회입법조사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관점에서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제2대 원장 취임



국회미래연구원은 6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연구원 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김현곤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의 기관 설립목적에 따라, 미래연구원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김 원장은 “연구원의 3대 고객인 국회, 정부, 국민과 개방적인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궁극적으로 연구성과물이 국회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일본 초쿠바대에서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미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제21대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이다.



국가재정사업은 무엇으로 선택받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2021년 예산이 짜이고 있다. 예산은 크게 예산편성, 예산심사, 예산집행, 결산심사, 성과평가라는 5단계를 거친다. 매년 6~8월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심의·편성하는 예산사정(豫算査定) 기간인데, 8천여 개 세부사업이 대상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단키트 선두주자라는 것을 알았다. 예산심사에서도 진단키트처럼 보다 신속·간이하게 좋은 예산을 판별할 방법이 없을까?

당나라는 관리등용 시 신언서판(身言書判), 품체와 용모·말씀씨와 품격·글씨와 문장력·판단력과 기획력을 요구했다. 등용기준이 넷에 한정될 수 없겠지만, 중요한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일 맥락에서 필·타·지·성(必妥持成), 필요성·타당성·지속성·성과 넷을 점검하면 좋은 사업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리라 본다.



정환철 행정회 사무차장
전 예결특위 입법심의관



필요성, 타당성, 지속성, 성과 네 가지 점검해야

필요성이란 무엇인가? 신수가 휩해야 등용되듯이 제안 사업이 국가재정의 미션·비전, 목표·가치 달성을 위한 공익 창출 등 일견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이 드러나야 한다. 다만, 필요성만으로 인정한다면 요구서류로 산을 쌓고 강을 메울 것이다. 경험상 사업이 불필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정부관료의 주장을 듣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이다.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정체성과 우선성 및 구체성을 점검한다. 정부의 역할, 재정건전성 및 예산제약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경계가 모호할 경우 우선순위라는 줄 세우기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정부 역할과 우선순위를 요구하면 국가재정으로의 편입 여제 효과와 배분·지출의 효율성 및 삭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상임위로서는 정부가 제출한 순위를 심사하고 예산한도 내에서 탈락시키면 되므로 사업 순서·규모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정우선과제에 밥순가락을 얹으려는 부처 편성전략은 국회엔 간편하고도 훌륭한 딜어내기 전략을 시사하는 셈이다. 2021년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중심인 한국형 뉴딜에 묻어가려는 예산이 대상이다. 또한, 사업의 구체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사업목표·환경·대상·수익모델·내용·기술수준·사업내우선순위·시기(時期·始期)·전체사업기간·사업방식·재원규모·조달방식·상호관계·추진네트워크·시행 법제도 준비 등의 적실성이 심사대상이다.

셋째, 지속성은 사업추진 준비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타당하더라도, 인적 조직과 물적 준비 등을 통해 지속적 집행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사업관리방식에 대한 신뢰성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회계연도 1년이라는 조건하에서도 추진주체·추진방식·지원조직·기술인력·예산지원·관리체계

·성과보존 및 활용방안 등 구체적·단계적 집행에 대한 관리계획을 잘 구축했는지, 실제 관리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한다.

넷째, 사업성과는 객관적이고 현저한 확신을 줄 정도여야 한다. 부처는 어떤 성과를 의도하는지, 자가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타자분석·평가는 어떻게 받을지, 성과보존·반영·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국회 심사도 부처에 성과목표, 달성방안, 측정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성과의 가치(Value) 측면과 수치상 이익(Profit)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지출이익(Profit for money)을 기본으로 지출가치(Value for money)를 부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재정사업의 성과측정이 어려운 점을 양해할 수 있지만, 성과가 불분명하면 사업의 출발도 불투명하다는 책임원칙에 기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 없는 사업은 폐지, 불분명한 사업은 추진조직·인력·예산 조정, 일부 존속 필요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통폐합, 성과조건부 1년 연장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단년도 성과측정이 곤란한 사업은 국회 및 정부 소속 평가전문기관이 장기적·전략적 성과평가 결과를 제안할 경우 심의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필·타·지·성은 국가재정이 자의(恣意), 지시, 온정과 호소, 유행, 이념, 종교, 세대, 성차별, 지역 이기심 등에 좌우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원나라 재상 야율초재(耶律楚材)는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출발시키기보다는 폐지하는 생사멸사(生事滅事)가 필요하다. 국가재정사업은 필요성·타당성이라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및 사전 준비의 철저함이다, 지속집행관리 및 성과 등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하겠다는 균형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후에야 시작할 수 있는 막중한 일임을 되새기고자 한다. 🍵

‘임대차 3법’의 나비효과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아마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법이 토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 같다. 이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4년 전세’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2년 후에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권리를 갖게 된다. 2년만 살고 싶으면 2년, 2년을 더 살고 싶으면 4년 동안은 전세금 올려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이 세입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 번 계약하면 4년은 살 수 있으니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거의 안정성이 과연 누구의 비용으로 나오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집주인은 한번 세입자를 받으면 4년 동안 내보낼 수 없게 되므로 집주인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르고 그 비용의 대가로 세입자들이 주거안정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비용은 세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전세금은 왜 올라갈까. 사실은 집주인 때문이 아니라 굳이 원인 제공자를 찾자면 세입자들 때문이다. 어떤 지역의 전세금이 3억 원이었다가 4억 원으로 오른다면 그건 전세금이 3억 원이던 동

네에 어떤 세입자들이 찾아와서 4억 원이라도 내고 살겠다고 계약을 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전세집이 두 채가 있고 전세금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전세금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 동네 전셋집에는 4억 원을 내고 들어올만한 세입자들이 꽤 많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쫓겨나고 4억 원의 전세금을 내고 새로운 세입자A와 세입자B가 그 동네에 들어왔겠지만 나는 임대차 3법 덕분에 전세금 3억 원으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다. 그러니 그 동네에 남은 전셋집은 한 채로 줄어들게 되고 그 집 하나를 놓고 4억 원은 기꺼이 내겠다는 세입자A와 세입자B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둘 중에 조금 더 부유한 세입자A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훨씬 더 오른 전세금 5억 원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되고 B는 전셋값이 3억 원 정도 하는, 주거의 질이 더 나쁜 동네로 쫓겨가게 된다.

자, 이 마을에서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시 들여다보자. 4년 전세를 보장하는 법이 없었다면 내가 전세금 3억 원인 더 열악한 마을로



쫓겨나게 되고 이 마을에서는 전세금 4억 원에 A와 B가 거주하게 됐을 텐데 4년 전세 보장법 덕분에 나대신 예비 세입자B가 쫓겨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쫓겨났다면 빈 집이 두 채여서 전셋집 구하기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한 집을 차지하면서 집 한 채를 두고 A와 B가 경쟁하게 되면서 전세금도 5억 원으로 더 오르게 됐다. 내가 받은 혜택은 결국 내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에 살게 됐을 또 다른 세입자들이 대신 치른 비용인 것이다.

인기 많은 지역일수록 세입자가 4년 거주권 비용 부담

그렇다면 내가 거주하는 집의 집주인의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2년만 살게 하고 내보냈다면 새로운 세입자 B를 받으면서 전세금 4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전세금을 더 올려받지 못하니 그만큼 손해다. 그러나 세입자를 바꾸면서 세입자를 새로 들이기 위해 도배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수고와 비용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2년 후에는 전세금이 5억 원으로 올라갈테니 전세금을 3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잃은 손실은 그 때 별충하면 된다.

왜 전세금이 5억 원으로 올라가느냐고? 2년 후에는 이 마을에 유일한 빈 집이 그 집 하나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세입자A가 거주하는 집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무렵 전세 매물로 나왔겠지만 세입자A 역시 4년 거주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세입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인기 거주지역에서 생기는 일이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5억 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4억 원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형성될 것이다.

게다가 4년 전세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들은 더 불편해진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게 된 세입자C를 가정해보자. 지금이라면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직장이 더 가까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겠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을 채우지 않고 떠날 경우 '직장이 더 가까운 다른 동네'로 이사갈 때 더 높은 전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도 4년 전세 보장법 때문에 더 저렴한 전세금을 내고 거주하는 또 다른 세입자D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D는 그 동네 전세금보다 저렴하게 계속 그 집에서 머물 것이므로 C는 그 동네로 이사갈 경우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금이 올라간다.

결국 세입자C의 입장에서는 직장은 좀 멀더라도 그냥 살던 동네에 계속 사는 게 금전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물론 더 저렴한 전세금으로 거주하게 되긴 하지만 그 저렴한 함은 어차피 2년 후에 다른 동네로 이사갈 때 더 비싼 전세금을 치르면서 반납해야 하는 1회성 혜택이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C는 4년 전세 보장법 때문에 불편한 동네에서 2년을 더 사는 선택을 감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들에게 4년 거주권을 보장해주면 인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입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치르는 비용의 총합은 2년만 거주할 수 있게 할 때의 비용의 총합보다 더 높다. 굳이 살고 싶지 않아도 4년을 채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억지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이다. 임대차 기간을 법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주거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수조 원을 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수고를 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 공무원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하는 짓일까. 🍵

글. 이진우(MBC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실패해도 괜찮은 작은 사회 '괜찮아마을'



박명호
'공장공장' 대표

서울에서 거의 10년, 제주에서 딱 1년, 지금은 전남 목포에서 이제 딱 3년을 살고 있다. 처음부터 바라던 건 한 가지. 선택지에도 없던 지방 소도시가 누군가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날 곳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살아갈 곳은 직접 선택하고 싶었다.

왜 서울 밖으로 떠났을까

2013년 가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던 어느 날. 용산역 급행열차가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가족과 직장, 사회에서 바라는 역할 놀이를 하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지 한참이나 흘렀던 어느 날이었다. 같은 충동이 반복됐다. 퇴사를 했다. 그렇게 퇴사 후 근 1년 가까이 전국 곳곳을 중고책을 팔면서 여행했다. 여행 후 직접 창업 두 번, 창업 구성원 참여 두 번을 거치면서 3년을 보냈다.

2017년 6월 6일, 전남 목포에 내려왔다. 빈집을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 무엇이든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실험주의자'를 양성하기 위해 작은 스타트업 '공장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어떤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개인이 가진 가치를 지키면서 사회적인 성취는 함께 이루면 좋겠다'는 꿈을 세운 뒤 그다음에 돈을 벌 방법을 고민했다. 돈은 어떻게든 벌 것인데 개인이 가진 가치를 짓밟으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다.

왜 '괜찮아마을'을 만들었을까?

'공장공장'은 '괜찮아마을'을 만들고 있다. 이곳 전남 목포에도 또래 친구들은 있다. 아쉽게도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결을 나눌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비슷한 결을 가진 친구



들을 모으고 싶다는 마음이 모여서 ‘괜찮아마을’이 됐다. ‘괜찮아마을’은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작은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인생을 다시 설계하거나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세상 어딘가 마음껏 쉬어가고 실패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곳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2018년 시작한 ‘괜찮아마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막막했다. 고심 끝에 시작한 6주간 진행되는 입주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기로 했다. 6주로 설계한 입주 프로그램은 쉽, 상상, 작은 성공 과정으로 진행된다. 쉽은 상담, 여행, 요리 등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상상은 자유 상상, 빈집 상상, 창업 상상 등 지역과 참가자 스스로를 주제로 마음껏 상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작은 성공은 음식 개발, 전시, 공연, 출판, 창업, 리패키징 등 무엇이든 작게라도 성취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쩌면 ‘괜찮아마을’이 만든 것은 새롭다고만 할 순 없다. 다만 일회성이고 소모적으로 멘토링만을, 창업만을, 도시재생만을 이야기하던 기존 사회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곳 주민들 중 대다수는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숙소 ‘괜찮은 집’에 함께 살며,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괜찮은 학교’라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 교육을 열며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도, 학생이 될 수도 있다.

주민들 누구나 각종 문화 행사를 직접 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배우고 경험을 나눈다. 현재까지 76명 입주 프로그램 참여자 중 32명이 지역에 체류 중이며 그중 8명은 창업을 했고, 또 21명의 청년들은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따로 또 같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일을 하고 있다.

‘괜찮아마을’의 지속가능을 위한 수익 활동(공간 조성, 교육 등) 역시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현재 1단계 계획을 위해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6억 6천만 원 용역을, 2019년과 2020년 사이 서울시 등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약 2억 원을 조달해 ‘괜찮아마을’ 기반을 쌓았다. 그렇게 ‘괜찮아마을’ 1, 2, 3기 총 76명 입주민을 받아 6주+a 입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재 ‘괜찮아마을’ 첫 번째 공간인 547.27m² 규모 노마드 코워킹 스페이스 ‘반짝반짝’이 6월 중 공개를 앞두고 있고, 1천561m² 규모의 ‘괜찮아마을’ 축소판 공간인 ‘쉬면서 일하는’도 건물 매입과 설계를 마쳤다. 가까운 강진, 해남, 신안, 화순, 완도, 광주 등과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콘텐츠, 여행, 교육 등 분야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서울을 떠난 지 3년 만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꿈이었던 서울 밖 더 나은 일자리 ‘공장공장’과 쉽과 실패를 제안하는 작은 사회 ‘괜찮아마을’을 만들었고, 이제 지속가능함을 위해 한 걸음을 떼고 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없는 지방,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어쩌면 꿈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

뇌에 새겨지는 아동 학대

최근 연이어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일으켰다. 충남 천안에서는 9살짜리 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아이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됐지만, 친부 역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받던 아이가 극적으로 탈출해 거리를 떠돌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아이는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한 채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거나 폭행을 당했다.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흔히 계부나 계모에게 초점을 맞추곤 하지만, 실제로는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가 훨씬 더 많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70~80%는 친부 또는 친모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며 탄식한다.

다양한 아동 학대의 원인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아동 학대는 대부분 훈육을 명분으로 한 체벌로 시작된다. 체벌에 관해서는 문화권에 따라서도 인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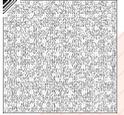
달라 어떤 곳에서는 정당한 부모의 행동이 어떤 곳에서는 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

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검색해보면, 제목만으로도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알 수 있다.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아동 학대 사건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장애가 있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부모는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부모는 자녀도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 원치 않은 임신도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부모의 정신 질환 역시 자녀 학대와 관련이 있다. 우울증을 앓는 부모의 자녀는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 영양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대한법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06~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자녀 살해 사건에서 가해자인 부모의 28.7%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일반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약 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아동 학대범이 사이코패스는 아니야

그러나 흔히 “그런 악독한 짓을 하다니 사이코패스인



가 봐”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동 학대범을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다. 2009년 핀란드 헬싱키대중앙병원 연구팀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벌어진 모든 자녀 살해범을 대상으로 정신병적인 증상을 조사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이 비슷한 일반 살인범과 비교했다.

그 결과 자녀 살해범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일반 살인범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알코올 남용, 반사회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정도도 일반 살인범보다 낮았다. 보통 사람이 치를 떠는 것을 저질렀음에도 그 원인이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학대를 받아온 사례가 많다. 2000년 경기도 과천에서 친부모를 살해하고 체포된 20대 청년 같은 경우가 자라 오면서 꾸준히 학대를 받아온 사례다. 2011년에도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과도하게 공부를 강요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뇌는 손상을 입는다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두뇌와 정서 발달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끼친다.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우울증을 겪거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살률 역시 높아진다. 아동 학대에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아동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해주는 조직인 백질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언어와 감정,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의 연결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 능력과 감정 조절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언어폭력도 육체적인 학대와 부정적인 영향이 비슷하다.

2017년에는 캐나다 맥길대 연구진이 이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뇌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살피기 위해 세 집단의 뇌 표본을 관찰했다. 아동 학대 경험이 있으며 자살한 집단, 아동 학대 경험은 없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한 집단, 그리고 아동 학대 경험과 정신 질환 모두 없는 집단의 뇌 표본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연구진은 오로지 아동 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만 뇌 신경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학대받는 아이를 찾아서 보호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받은 상처는 이미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 학대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실 이번엔 벌어진 두 사건 이전에도 아동 학대 사건은 꾸준히 발생했고,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드러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만큼 완벽한 예방이 어려운 게 현실이겠지만, 그럼에도 제발 이런 소식을 들을 일이 다시는 안 생기면 좋겠다. 🙏

글. 고호관(과학칼럼니스트)



신라 과학의 아름다운 흔적, 경주 첨성대



국보 31호 경주 첨성대, 7세기, 높이 9.17m

경주의 도심에는 신라를 상징하는 문화재가 많다. 그중에서도 국보 31호 첨성대(瞻星臺)는 두드러진다. 거대한 고분들 사이로 우뚝 솟은 석조 건축물. 규모가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세련된 곡선이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선덕여왕(재위 632~647년) 때 세운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천문 건축물이라기보다 한 점의 멋진 조형미술 같기만 하다.

높이 9.17m에 윗부분 지름 2.5m,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사각형의 기단부를 만든 뒤 한 단 한 단 돌을 둥글게 배치하면서 쌓아 올렸다. 위로 갈수록 좁아들도록 했고 맨 위엔 다시 직선의 돌을 2단으로 쌓아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마감했다. 외부는 매끄럽게 잘 다듬었지만 내부는 돌의 뒤뿌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벽면이 고르지 않다. 중간에는 3단 높이(13~15단 사이)로 입구를 냈다.

첨성대에 대한 재미있는 추정들

첨성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일까. 재미있는 추정도 많이 전해온다. 첨성대의 기단부와 정자석 사이는 모두 27단이다. 27대 임금 선덕여왕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기단부와 몸체를 합하면 28단. 동양 별자리의 기본인 28수를 상징한다고 한다. 첨성대를 구성하고 있는 돌은 모두 365개. 1년 365일을 상징한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 이야기는 모두 첨성대가 천문 관측대였다는 믿음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정말로 별을 관찰했던 천문대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첨성대를 천문 관측대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 실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견해가 다양함에도 역시 대세는 천문대설이다. 이것은 첨성대가 천문 관측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견해다. 이에 따르면, 사다리를 이용해 첨성대 중간의 작은 출입구로 들어가 그곳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뒤 맨 꼭대기에 기구를 올려놓고 천문을 관측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첨성대 내부의 출입구 아래쪽은 막돌로 채워져 있어 거기 사다리를 놓고 다시 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출입구엔 사다리를 놓았던 흔적도 남아 있다. 또 첨성대 정상부에는 관측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넓적한 판석(板石)이 깔려 있다.

일제강점기의 첨성대 사진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경주로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첨성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 지금 첨성대에 올라가면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지만 그 시절엔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진은 첨성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성대는 천문을 관측하기에 다소 불편해 보인다. 맨 위쪽 공간(2.2m²)이 비좁기 때문이다. 천문을 관측할 것이라면 애초부터 외부에 사다리를 놓고 정상까지 올라갈 일이지 굳이 힘들게 중간의 좁은 문을 이용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래서 천문대설을 반박하는 견해도 있다. 제단설, 해시계설, 우주우물설, 미륵신앙설 등. 제단설은 첨성대가 제천의식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첨성(瞻星)’이라는 말은 ‘별을 관측한다’는 뜻이 아니라 ‘별을 우러러 본다’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제천의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첨성대 맨 위에 있는 우물 정(井)자 모양의 돌은 비를 기원하는 기우(祈雨)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해시계설은 계절의 절기나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견해다. 첨성대에 들어온 빛을 통해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측정했다는 주장이다.

우주우물설은 매우 이색적이다. 우주우물설은 첨성대가 현세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우물을 상징한다는 견해다. 우주우물설은 첨성대의 특이한 모양이 우물을 형상화했다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김유신 집터에 있는 재매정(財買井)이라는 우물과 구조가 똑같은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첨성대 정상부가 우물 정(井)자 모양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신라인들은 우물을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여겼고, 따라서 첨성대 역시 현세와 신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우주우물이었다는 설명이다.

미륵신앙설은 우주우물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



경주 첨성대의 위부분



경주 첨성대의 몸통 부분

장이다. 먼 훗날 이 땅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미륵이 내려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우물 모양의 거주 공간이라는 견해다. 흥미롭지만 상상력을 너무 발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첨성대의 실체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천문대설이 대세라고 해도 첨성대의 실체는 정녕 무엇일까. 다양한 견해를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하늘과 관련된 그 무엇이다. 여기서 고대의 천문관(天文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첨성대가 축조됐던

1300여 년 전, 천문·정치·종교·제의·농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태양과 별은 절대 신성의 존재였고, 그것을 우러르는 것이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제의의 요체였다. 그렇다 보니 천문 관측은 농경이나 종교·신앙과 밀접했다. 이 같은 천문관을 고려해 본다면, 첨성대를 어떤 하나의 기능만 지닌 건축물로 보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보다는 하늘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꼭 관측기구를 만들어놓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을 관측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첨성대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천문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을 지금처럼 꼭 관측기구를 올려놓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을 관측했던 천문대였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삼국시대의 천문학은 지금의 그것과는 달리 점성술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천문대의 범위도 그만큼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박성래의 ‘한국인의 과학정신’에서)

그렇지만 그 누구도 뭐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의문은 이어질 것이고 연구도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첨성대 주변을 발굴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언젠가 발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발굴이 이뤄진다고 해서 이 궁금증이 만족스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첨성대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저 멋진 외형과 함께 첨성대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 수 없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법(法)은 나와 상관없다? 어렵다?'
법에 대한 편견을 확 깨버리는
통통 튀는 법률 이야기

유쾌

통쾌

상쾌

진행
박지훈 (변호사)

출연진

송윤 (변호사)
양윤선 (국회방송 기자)
이지선 (경향신문 기자)
임방글 (변호사)



화요일 오전 8시 45분 방송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옥포항 한쪽 끝에서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이 시작된다. 옥포만의 맑은 바다를 보며 걷는다.

승전고 울리던 그 바다에서 다시 푸르러지는 사람들

경남 거제시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왜의 수군을 물리친 첫 번째 승전, 옥포해전. 그 전장의 바다를 보며 걷는 길이 경남 거제시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원래 8.2km인데 그중 덕포해수욕장 이후 구간을 생략하고 옥포항~팔랑포마을~덕포해수욕장까지 약 5.3km를 걸었다. 임진왜란 당시 스물세 번 싸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승전의 기록, 그 처음을 장식했던 옥포의 바다가 빛난다.



옥포해전, 그 전장의 바다를 걷다

1592년 음력 5월 4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판옥선 24척, 협선(대형 전투함의 소형 부속선) 15척, 포작선(어선을 말하는데, 배가 작고 가볍고 빨라 그 장점을 살려 전투에 사용했다) 46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끌고 전라좌수영을 출발한다. 왜의 수군에 밀려 고전하던 경상우수사 원균이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당포에서 원균의 수군과 합류한 이순신은 5월 6일 밤을 거제도 송미포에서 보냈다. 그리고 5월 7일 새벽에 천성·가덕 방향으로 향하던 조선의 함대는 옥포만에 적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옥포만으로 진격한다.

당시 옥포만에는 왜의 군함 30여 척이 정박해 있었다. 조선의 함대를 발견한 왜의 수군은 6척의 배를 조선의 함대 쪽으로 보냈다. 옥포해전은 그렇게 시작됐고, 적선 26척을 격침시켰다. 아군의 피해는 '부상 1명'이 전부였다.

이어 합포(현재 창원시 진해구 학개마을) 앞바다에서 적선 5척을 격침, 5월 8일에는 적진포(현

재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앞바다에서 적선 13척을 격침시켰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첫 번째 승리, 옥포해전을 포함해서 이순신의 함대는 스물세 번 싸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의 출발지점이 옥포항이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첫 승전고가 울리던 그 바다에 크고 작은 배들이 평온하게 정박해 있었다. 그 풍경을 보며 항구 끝으로 걷는다. 그곳에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의 출발지점이 있다.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옥포해전에 대해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꼼꼼히 읽고 길로 접어들었다. 오른쪽은 옥포의 바다이고 왼쪽은 산기슭이다. 갯내음과 숲 향기가 어우러져 여행자를 반긴다.



옥포만

팔랑포마을

옥포대첩
기념공원

덕포
해수욕장



바닷가 데크길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

바닷가 데크길, 숲길 지나 팔랑포마을에 도착하다

바다 위에 놓인 데크길을 걷는다. 데크길 아래 바닷물이 맑고 푸르러 그 바닥까지 보인다. 제멋대로 생긴 깃바위가 햇빛에 빛난다. 멀리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들에 그날 조선 수군의 함대가 오버랩된다.

바다 위에 놓인 데크길이 숲으로 이어지는 곳에 정자가 있다. 정자에 앉은 외국인들이 그 풍경을 바라본다. 반대편에서 걸어온 다른 외국인들은 옥포항 쪽으로 걷는다. 정자를 지나가는 바람에 땀을 말리는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고 갔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면 길은 숲으로 들어간다. 바닷가 낮은 산이지만 하늘을 가린 나무 때문에 숲이 깊게 느껴진다. 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인다. 숲은 싱그럽고 바다는 빛난다.

지금의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서 태어난 '정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에 녹도만호가 되어 옥포해전에 참전해서 일본군 중선 2척을 격침시켰다.

이후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워 절충장군이 됐다. 임진년 9월 1일 부산포해전에서 적이 쏜 대철환에 머리를 맞고 전사했다.

충북 청주가 본관인 지세포만호 한백록은 옥포해전에서 5척의 왜선을 격침시키는 공을 세웠다. 같은 해 7월 8일에 있었던 한산도해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미조항 부근에서 전사했다.

옥포해전에서 선봉장으로 참전해 경상우수군과 함께 적선 5척을 격침시킨 옥포만호 이운룡은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공을 세웠다.

숲길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에 옥포의 바다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그렇게 도착한 팔랑포마을에는 바닷가 '몽돌해안'을 드나드는 파도의 공명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들렀다가 덕포해수욕장에 도착하다

몽돌 깔린 작은 해변, 대문 앞 빨래건조대에 빨래가 널렸다. 바람에 빨래가 깃발처럼 나부낀다. 개 짖는 소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봉안된 효충사와 23인의 위패가 봉안된 거충사 등이 있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본 옥포 앞바다



덕포해수욕장으로 가는 숲길



리 하나 없는 그곳은 몽돌해변을 드나드는 파도의 공명 소리가 있어 더 적막하다.

길가에 개망초꽃이 피었다. 수더분한 길은 도로로 이어진다.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가는 길이다. 길가에 놓인 긴 의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았다. 그 옆자리를 차지한 고양이 한 마리가 졸음에 겨워 눈을 껌벅거리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고양이 턱을 간질인다. 고양이는 이내 잠이 든다. 저 아래 보이는 옥포의 바다가 그 풍경의 배경이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옥포해전의 승리와 이순신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기념관과 이순신 장군 사당, 기념탑 등이 있다. 공원 일대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와 왔던 길을 되짚어 간다. 길 오른쪽에 덕포해수욕장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 산길로 접어든다. 덕포까지 1.64km 남았다.

숲이 우거져 산세가 깊게 느껴진다. 높게 자란 나무들이 ‘숲터널’을 만들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 길에는 사람도 드물다. 간혹 시야가 트이는 곳을 만나면 숲 밖의 빛나는 풍경을 즐긴다. 숲길은 호젓하고 숲 밖은 찬란하다.

숲길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야가 트이는 곳을 만났다. 도착지점인 덕포해수욕장이 보인다. 바닷가에서 웃고 떠들며 노는 소리가 숲까지 올라온다. 산골짜기 물이 바다가 되는 곳 위에 물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놓였다.

다리를 건너 덕포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작은 해변은 여느 해변의 여름 풍경과 다른 게 없다. 바닷가 사람들의 얼굴에 해보다 더 환한 웃음이 가득하다. 청춘 남녀의 푸르름이 바다보다 짙고, 해맑은 아이들의 기운은 파란 하늘보다 높다. 오래전 전장의 바다, 그 바다를 지키던 옛사람들의 마음도 이 길 위에서 다시 푸르러진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조사와 어미 바르게 쓰기



한글 맞춤법 제3장 형태에 관한 규정 중 제14항과 제15항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앞말과 구별해 적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사와 어미를 적을 때, 앞말의 받침소리와 분리해 적으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역국이’를 ‘미어구기’로 적는다거나 ‘식어요’를 ‘시거요’라고 적지 말라는 것이다. 규정은 매우 단순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걸까?

우선 ‘함으로’와 ‘하므로’ 중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앞서 살펴본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하므로’를 올바른 표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함으로’에는 원인이나 이유 또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조사 ‘-으로’가 사용됐고, ‘하므로’에는 까닭이나 근거를 뜻하는 어미 ‘-므로’가 사용되어 의미만 조금 다를 뿐, 둘 다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만으로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면 ‘함으로’ 뒤에는 ‘말미암아’나 ‘인하여’ 등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므로’는 ‘기 때문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별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동선을 다르게 () 접촉을 최소화했다”라는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함으로’일까, ‘하

므로’일까? 만약에 괄호 안에 ‘하기 때문에’를 넣어 자연스럽게 다면 ‘하므로’라고 적어야 하겠지만, ‘함으로 말미암아’나 ‘함으로 인하여’를 넣어 자연스럽게 다면 ‘함으로’라고 적어야 한다. 간혹 공문서에서 ‘하므로써’라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함으로써’라고 적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어미 ‘다시피’는 매우 까다롭다. ‘다시피’가 어미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형용사 ‘싶다’가 ‘싶이’의 형태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말했다싶이’나 ‘알다싶이’, ‘살다싶이’라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가깝거나 ‘는 바와 같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했다다시피, 알다다시피, 살다다시피’처럼 ‘다시피’라고 써야 한다.

게다가 ‘알다’나 ‘살다’처럼 어간 받침에 ‘ㄹ’이 사용된 경우, 어간 뒤에 오는 말의 첫음절에 ‘ㄴ/ㅁ/ㅅ’이나 ‘오/ㄹ’이 사용된 경우 ‘ㄹ’이 규칙적으로 탈락한다. 따라서 동사 ‘알다’에 어미 ‘다시피’가 결합할 때는 ‘알다다시피’라고 적지만, 동사 ‘알다’와 어미 ‘다시피’ 사이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끼어들면 ‘아시다다시피’로 적어야 한다. ‘살다다시피’와 ‘사시다다시피’라고 적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다.

끝으로 제15항의 [붙임2]에서는 종결형 어미 ‘-오’가 ‘요’로 소리 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도록 하고 있고, [붙임3]에서는 연결형으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종결어미 자리에서 “이것은 책이요”라고 소리 나더라도 “이것은 책이오”라고 쓰고, “이리로 오시요”라고 소리 나더라도 “이리로 오시오”라고 써야 한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박병석 국회의장·김상희 국회부의장 선출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2020. 6. 1. ~ 6. 30.

- 1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 것…방역·경제서 역할”
- 2 •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 3 • 미국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무급휴직 곧 종료
- 4 •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 5 • 국회, 제21대국회 첫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국회부의장에 김상희 의원 선출
- 6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등,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7 •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파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8 •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상품권 순차 지급 시작
• 99일 만에 모든 학생 정상 등교…초5~6·중1 등 135만 명 등교
•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1년 9개월 만에 불통
- 9 •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북한 “청와대 포함 모든 연락선 차단·폐기”
• 세계은행, 올 세계성장률 -5.2% 전망…“2차대전 후 최악 침체”
- 10 •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범여권 인사 한 자리에
•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 민주노총,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 11 •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외부전문가 기소여부 검토
- 13 •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 시험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
- 15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미래통합당은 표결 불참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의 표명
- 16 • 통일부 “북한, 오후 2시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 청와대, NSC 회의 긴급소집…연락사무소 폭파 논의
- 17 • 북한 “금강산·개성공단·GP 군 배치…서해상 훈련 재개”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남북관계 악화 책임”
- 18 •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전격 방미…비건과 수석대표 협의
• 한·일, WTO서 법적 분쟁 본격화…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 19 • 박병석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 위한 본회의 취소
•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
- 20 • 통일부 “북한 대남전단 살포계획 매우 유감…즉각 중단해야”
- 21 • 정부, 유네스코에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지정취소 요구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18개 위원장 다 가져가라…금주 국회 복귀”
- 24 •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대남확성기 철거
•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사찰회동에도 원구성 ‘빈손’
- 25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1%로 전망…내년 3.0%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만장일치 재선임
- 29 • 국회, 본회의 열고 제21대국회 상임·특별위원장 선출
• 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정리. 김현아

전방위 소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뒤 해빙 분위기였던 남북 관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 폭탄과 대남공세 예고로 출렁거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대외 상황이 예측불허인 가운데 남북 관계도 주요 변수임을 새삼 상기시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선포한 6·15 공동선언 20주년 즈음에 남북 관계가 또 한 번 출렁거린 것입니다. 일부의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순항할 것 같던 남북 관계가 언제든지 격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음을 환기시켜주어 안타까움이 더 크지만, 지혜롭게 풀어가야겠지요.

일본은 남북 관계 향방에 예민합니다. 측근 비리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위험수위로 하락해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남북 관계 변수를 자신의 지지율 만회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지 주목됩니다. 그는 남북 화해 국면에서 북미를 이간질하려 했다고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죠.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집된 외교역량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설 외교의 시간이지요. 국내 정치도 소통이 중요한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제21대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적잖은 파열음을 내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켰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소통을 매우 중시합니다. 의장 당선 인사 등에서 국회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라고 규정했지요. 국회가 취할 첫 걸음으로 소통을 들 정도입니다. 박 의장은 제21대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구성원들에게 전방위 소통을 주문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국회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문화공연과 참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공연과 참관이 코로나19로 2월 이후 정지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국회보 제작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원상 복원될 날을 고대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6개월째. 일상이 불편하지만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해야지요. 사람은 생활 속도를 줄이고, 자연은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연대하면 마침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겠지요. 🍀



이춘규
문화소통기획관·편집인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 독 백 〉

- 기 간 : 2020. 7. 1.(수) ~ 7. 31.(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작 가 : 유예진
- 전시품 : 〈오아시스〉등 회화 13점
- 문 의 :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296

